

핵추진잠수함 건조 제반요소·대미협 의사항 논의

국방부,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 개최
군사·외교·과학 관련 다수 부처 참여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주요 과업을 논의할 범정부협의체(TF)를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여러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졌다.

이날 열린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10개 관계 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



원종대(앞줄 왼쪽 넷째)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등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에 포함된 관계부처·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첫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 제공

반요소, 대미협 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

협의체로 발전시키겠다”며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령 기자

전시 동원 건설기계 검차 절차 대폭 간소화

국방부, 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MOU
1대당 시간 7분의 1로...예산 절감도

전시 동원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우리 군의 검차(점검·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민간 전문기관에서 지원받는 협약이 체결되면서다. 군의 1대당 검차 시간은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게 됐다.

국방부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유사시 굴착기, 도저 등 민간 건

설기계를 동원한다. 기계들은 전방 전개나 파손된 도로 복구 작전 등에 쓰인다. 그러나 건설기계 동원 집행 절차 중 검차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됐다. 확실한 검차를 위해 높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군 자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군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군이 담당하는 건설기계 검차 항목은 기존 11개에서 2개로 줄었다. 1대당 검차 소요 시간은 평균 3분 30초가 소요됐지만, 30초가량으로 확 짧아졌다. 검차반 편성 인력도 3명에서 1명으로 완화, 총 1만5000여 명이 5000여 명으로 감소해 개전초기 작전병력 운영 여건이 개선될 전



김신숙(왼쪽 셋째)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한동민(오른쪽 셋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이 17일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방부 제공

망이다. 검차단 전문성 확보 예산인 177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기대된다.

‘비상대비 업무 발전을 위한 건설동원분야 협의회’도 구성했는데, 이 조직은 예비 전력발전 업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창구

로 활용된다.

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예비 전력은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유력한 대안”이라며 “예비전력 발전은 민관군 협조체계 발굴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균형성장 한마음 한뜻으로 지자체와 협력 강화

방사청, 전남 강진군과 상생자매결연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8일 “전남 강진군과 ‘지방살리기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식’을 전달 가졌다”고 전했다.

방사청과 강진군은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홍보·참여 △지역 내 기관 행사 추진 및 휴가철 직원 방문 권장 △기관 기념품·명절선물 구매 시 자매결연 지역 특산품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번 자매결연이 지난 8월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 균형성장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3일 강원 인제군, 4일 강원 삼척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



방위사업청과 전남 강진군 관계자들이 17일 ‘지방살리기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방사청 제공

성장을 위해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

련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국방원가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환

방진회, 공정성·전문성 강화 방침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18일 방위산업 원가관리 전문자격인 ‘국방원가관리사’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공식 전환됐다고 밝혔다.

방진회가 주관하는 국방원가관리사는

군수품 연구개발, 제조, 용역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원가 산정 및 하도급 원가관리 등 방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자격증이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되며, 방산원가 계산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방진회는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으로 전환되면서 공신력은 물론 방산원가 분야 인력 양성체계가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격의 활용성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진회는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 △교재 및 교육 콘텐츠 고도화 △교육시스템 개선 등 종합적인 운영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로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방산 사업의 원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K방산의 국제 경쟁력을 뒷받침할 실무형 전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시연 기자